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 보도자료

단장 : 한정애 국회의원

간사 : 박홍배 국회의원

위원 : 강준현·고민정·김기표·김성화·김영배·박희승·백승아·모경중·이용우·이재강·이정문·
정준호·홍기원 국회의원 / 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이소라(서울시의원)·홍재희(강서구의원)
봉건우(전국대학생위원장)

한정애 의원실 : 02-784-3051, jeoung@gmail.com

국립외교원, 채용 관련 자체 매뉴얼 위반해가며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게 노골적으로 특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합격사례 심총장 자녀가 ‘유일’
- 공고일 기준 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예정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비위로 규정해놓고도 소지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 최종선발
- 한정애 단장, “심 총장 자녀 채용은 권익위 매뉴얼과 외교부 자체 매뉴얼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채용 비리사례”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외교원은 심총장 자녀의 응시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으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했다.

더욱이 이번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립외교원은 심총장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이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마련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과정상 중대, 반복 과실 및 착오사항으로서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이는 채용절차공정화법령 및 권익위가 전부처에 시달한 공정채용기준 업무처리 매뉴얼에서 '별도의 변경절차없이 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것을 채용비리'로 규정한 것과도 같다.

즉 국립외교원이 그동안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간주해 채용했다고 하는 해명은 권익위의 매뉴얼도, 자신들이 정한 자체 매뉴얼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심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이 채용비리로 '무효'가 된다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지원한 외교부 공무직 채용도 함께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애 단장은 "채용 관련 법령과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관계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심 총장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정애 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오는 금요일(11일)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 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이 단장, 박홍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강준현·고민정·김기표·김성화·김영배·박희승·백승아·모경중·이용우·이재강·이정문·정준호·홍기원 국회의원과 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이소라(서울시의원)·홍재희(강서구의원)·봉건우(전국대학생위원장)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끝-